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 상환 급증

만기 10년 이상 20%서 58%로 상승 60%가 "분할 상환" ... 상환 부담 덜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지고 분할 상환과 고정 금리 방식의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21조6천억원으로 평균 약정 만기는 12.7년(일시 상환 3.3년, 분할 상환 19.1년)이라고 12일 밝혔다.

2004년 말과 비교해 약정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은 20.7%에서 58%로, 5년 초과~10년 이하는 3.5%

서 7.2%로 커졌으며 지난해 신규 대출액의 71.3%가 만기 10년 초과였다. 반면 만기 3년 이하는 60.1%에서 24.6%로, 3년 초과~5년 이하는 15.7%에서 10.2%로 낮아졌다.

또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 비중이 76.8%(130조3천억원)에서 40.8%(90조4천억원)로 작아지고 대신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 비중은 23.2%(39조5천억원)에서 59.2%(131조2천억원)로 커졌다.

이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에 9천억원, 2월에 8천억원 증가하며 22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1~2월 증가액 1조7천억원의 작년 한 해 증가액 4조6천억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방학 이사철 등 계절적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융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대출 만기의 장기화와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 증가로 차주의 원금 상환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다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상환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작년 말 현재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 가운데 88.1%(115조6천억원)가 거치식이고 평균 거치 기간은 2.8년이었다.

변동 금리형 대출의 비중은 2006년 9월 말 97.4%에서 작년 말 91.7%로 감소한 반면 혼합 금리형은 1.5%에서 6.1%로, 고정 금리형은 1.1%에서 2.1%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2004년 말 1.8%에서 2005년 말 1.1%, 2006년 말 0.6%, 작년 말 0.4%로 낮아졌고 담보인정비율(LTV)도 같은 기간 56.4%에서 52.2%, 49.5%, 47.9%로 하락했다.

한편 2월 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1조4천억원으로 올해 2조9천억원 증가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올 들어 추가 하락으로 주식시장의 저평가 매력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발 악재로 글로벌 증시의 조정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

12일 증권·자산 운용업계에 따르면 펀드전문가 5명에 게 지금 국내 주식 펀드에 가입해도 되는지 물어본 결과 4명의 전문가들이 "아직은 펀드에 가입할 시점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신용 위기 등이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꼽았다.

현재 1,600대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지수가 전

저점(1,580선)을 하회할 수 있으니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국내 주식형펀드 가입 시점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신상근 삼성증권 자산배분전략 파트장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며 "미국발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코스피지수 1,600선이 지켜지는 지 여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가 미국발 악재로 흔들리며 악재흐름을 이어갈 때를 들어 올릴지 국내 주식형펀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 100억원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620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32%로 손실을 내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주식형펀드들의 자금 유입세도 추축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2천12억원씩 늘어나던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지난 7월에는 68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여전 주식형펀드 가입 '아직은' ... 美 서브프라임 등 추가 하락 가능성 커

올 환율 전망치 상향 대부분 연구기관 수정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 연구기관들이 올 환율 전망치를 수직 상승시키고 있다. 일부 연구기관이 상반기 평균환율 전망치를 950원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는 등 대부분 연구기관이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산하 기은경제연구소는 최근 연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933원으로 수정했다.

올 초 전망치 918.50원에 비해 14.50원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전망치를 916.50원에서 940.00원으로 23.50원 높였고 하반기 전망치도 920.50원에서 925.00원으로 4.50원 상향했다.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2008년 세계 및 국내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4.7%로 낮추면서 연평균 환율 전망치도 925.00원에서 9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국제섬유박람회에서 재단법인 신라염공진흥원이 천연염색 원단으로 자체 디자인한 의류를 패션쇼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처벌' 정몽구·박용성 회장 국민연금, 이사 선임 반대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경제범죄 혐의로 사법 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의 경영 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오는 14일과 21일에 각각 열리는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주총회에서 등기가사로 들어가는 데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대가리 오너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재벌 오너의 이사선임에 거부사를 표시하기로 한에 따라 해의 투자자 등 다른 주요 주주들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 지분 4.56%,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2.9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중 하나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전체 지분구조상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이래서 금리 못내린다"

韓銀, 금리 인하론 반박 보고서 눈길

최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론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고민하며 7개월째 정책금리를 동결해온 한은이 앞으로도 선불리 금리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은은 12일 '내외금리차와 환율 간 관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2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실증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내외금리차 변동과 환율 간에는 뚜렷한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글로벌화·규제완화 추진 건설산업 선진국형 혁신"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산업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글로벌화·규제완화 추진' 강연회에서 "고숙련도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면서 우리기업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어 각종 제도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5%, 고용의 8%를 차지하는 국가간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설산업이 선진국형으로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등 공공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주를 하면 업계, 나아가 경제도 이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업계의 글로벌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구 등을 건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또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11일부터 건자재 매점매식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면서 "건자재 가격 인상을 적기에 공사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밀가루값 폭등에 쌀 매출 급상승

대형 마트 21% 올라

밀가루 등 원료 상승에 따라 각종 식품가격이 오르는 식비를 절감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쌀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GS리테일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2월 29일 제외) GS마트와 GS수퍼마켓의 식품 매출추이를 집계한 결과 쌀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3% 상승했다.

월별 집계에서도 쌀 매출은 작년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8.9%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1월에는 14.9%, 2월에는 18.7%, 3월 들어서는 26.4%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올

해 들어 크게 오르고 있다고 GS리테일은 전했다.

특히 쌀 중에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상등미의 경우 10kg미만 제품은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15배 이상으로 늘었고 10kg짜리는 74.3%, 20kg짜리는 22.7% 신장했으나 가격이 비싼 특등미는 1.5%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보통 쌀 매출은 램살이 나오는 1년 중 9~10월에 가장 높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데 이처럼 연초에 쌀 매출이 오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GS리테일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흥국쌍용회계사무사	흥국쌍용회계 본사직영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3/14	062-410-1423
기아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	자동차 카매니저/자동차 판매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4	062-574-8011
한스메드광주지사	영업부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15	062-369-0513
HRN	[SK텔레콤 서부지사] N/W기획팀 여 사무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17	011-9473-1425
이모레퍼시픽	헤라, 설화수 매장관리(광주,전주,순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7	062-231-1781
한림제약	한림제약(주) 영업부(광주) 사원	대졸/경력무관	3000~3200	03/17	062-3489-6142
포도양주	영업 및 경영보조(실내근무) 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8	062-222-0945
동양종합기획	맥 편집 디자인 직원 모집 (신입/경력 무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8	062-222-5349
동양종합기획	정규직 영업관리 사원(소방관련 자격증소지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18	062-382-2114
워딩스케이	정규직 워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9	062-233-6119
코넷	회계 등 경영지원직	회사내규	회사내규	03/20	062-602-7765
S&D	레저용품 소판을 워딩디자이너/택배포장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0	062-674-4887
이화위렛탄 [평동공정]	생산직/조립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31	062-944-9022
히승상사	하승상사(주) 상품입고, 납품 남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26-103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과대광고' 들·흙집대 업체 7곳 고발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대광고를 한 들·흙집대 업체 7곳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유행 돌침대와 흙집대 업체 8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반 공산품인 돌침대 또는 흙집대를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효과를 언급하는 등의 의료기기 유사하게 광고한 업체 5곳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2곳을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 공산품인 돌침대 또는 흙집대에 대해 '혈액순환 촉진, 질병예방' '인체내 노폐물 배설 촉진' '세포활성화, 신진대사 활성화' '허리디스크·성인병 예방'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대상 8개 업체 가운데 나머지 1곳은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으나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실시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금지 또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